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5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가.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및 자문수당 현실화를 통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기피 현상 개선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개 모집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 및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다. 직원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에 대한 변호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 보장

2.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안 제2조제2항)
- 다. 자문수당(고문료) 상향(안 제6조제1항)
- 라. 중요 법률자문 액수 상향(안 제6조제3항)
- 마. 직원등의 변호비용 지원(안 제12조)
- 바. 착수금 지급 기준 상한 변경(5억→7억)(안 별표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 6. 6. ~ 2022. 6. 25.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그 밖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4. 소송수행 중 다음의 사유로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 나.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의 자문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수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즉시 소송 서류 일체를 시에 인계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급된 착수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행정심판(조세심판을 포함한다) 및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
3. 공무원 등 내부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4. 자치법규 등 법령의 해석 및 질의 등에 관한 검토
5.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적 검토 및 자문
6.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② 시에서 근무했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자문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고, 지급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또는 그 밖의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추정가액(분쟁, 위험 등이 현실화 되었을 때 추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내
2.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이내
3. 추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과 별표 2의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

(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착수금을 지급한다.

②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소송대리인이 수입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제1항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제11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기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입한 사건에 대해

여는 사건의 최종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비용 등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행정심판 등의 비용) 시장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고문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여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재결 등 결정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6.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1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
4. 패소 시 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5. 시의 행정 또는 재정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변호비용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 집행

2.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개인단독사건: 400만원 이내

나. 다수관련사건,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2.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3. 공무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시장이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③ 시장은 변호비용등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정과 관련하여 직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소송수행 공무원의 책무 등) ① 소송수행 공무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시 본청의 송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무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법무총괄부서 장의 지시나 방침과 다르게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법적 근거 및 증거서류 등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법무감사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법무감사관 김 승 한
	팀장 직위 · 성명	법무팀장 최 설 미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노 성 주 (790-5615)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 사 소 송	가.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다만,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급한다.	◦ 청구서
	나.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행 정 소 송	가. 집행정지 등 각종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청구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공 통	가.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청구서
	나. 강제집행신청(각 신청별)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청구서
기타	가. 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 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5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청구서

※ 위 각 신청 사건의 경우 대리인이 변론 등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 회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p>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다. 중재사건은 경제적 이익이 중재 목적 가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 중 해당서류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기타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p>가.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나.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다.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라.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마. 교통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바. 등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사. 증인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아. 출장여비 :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해당비용의 납부명령서 또는 납입영수증 중 해당서류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일람표(제7조제1항 관련)

소송물가액	지급액	소송물가액	지급액
5,000만원미만	2,000,000원	7,900만원이상	2,340,000원
5,000만원이상	2,050,000원	8,000만원이상	2,350,000원
5,100만원이상	2,060,000원	8,100만원이상	2,360,000원
5,200만원이상	2,070,000원	8,200만원이상	2,370,000원
5,300만원이상	2,080,000원	8,300만원이상	2,280,000원
5,400만원이상	2,090,000원	8,400만원이상	2,390,000원
5,500만원이상	2,100,000원	8,500만원이상	2,400,000원
5,600만원이상	2,110,000원	8,600만원이상	2,410,000원
5,700만원이상	2,120,000원	8,700만원이상	2,420,000원
5,800만원이상	2,130,000원	8,800만원이상	2,430,000원
5,900만원이상	2,140,000원	8,900만원이상	2,440,000원
6,000만원이상	2,150,000원	9,000만원이상	2,450,000원
6,100만원이상	2,160,000원	9,100만원이상	2,460,000원
6,200만원이상	2,170,000원	9,200만원이상	2,470,000원
6,300만원이상	2,180,000원	9,300만원이상	2,480,000원
6,400만원이상	2,190,000원	9,400만원이상	2,490,000원
6,500만원이상	2,200,000원	9,500만원이상	2,500,000원
6,600만원이상	2,210,000원	9,600만원이상	2,510,000원
6,700만원이상	2,220,000원	9,700만원이상	2,520,000원
6,800만원이상	2,230,000원	9,800만원이상	2,530,000원
6,900만원이상	2,240,000원	9,900만원이상	2,540,000원
7,000만원이상	2,250,000원	1억원이상	2,550,000원
7,100만원이상	2,260,000원	1억5천만원이상	2,800,000원
7,200만원이상	2,270,000원	2억원이상	3,050,000원
7,300만원이상	2,280,000원	2억5천만원이상	3,300,000원
7,400만원이상	2,290,000원	3억원이상	3,550,000원
7,500만원이상	2,300,000원	4억원이상	4,050,000원
7,600만원이상	2,310,000원	5억원이상	4,550,000원
7,700만원이상	2,320,000원	6억원이상	5,050,000원
7,800만원이상	2,330,000원	7억원이상	5,550,000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3조, 제7조제1항 및 제3조, 제12조 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 제6조제1항 고문변호사 고문료의 증가
 - 제6조제3항 중요법률자문수수료 신설
- ☐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등
 - 제7조제1항 및 제3항 고문변호사 보수 상한액의 증가
- ☐ 직원등의 변호비용등의 지원
 - 제12조 제2항 직원등의 변호비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 2023년 본예산 기준 변호사 보수 및 직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조례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증가하는 소요예산을 더하여 추계함.

나.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자문수당

- ☐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문료와 법률자문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자문수당으로 구분함
-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문변호사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문료를 2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 중요자문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출함
 - 안산시: 2021년(300만원), 2023년(500만원) 각 1건씩 중요자문으로 지정하여 비용 지급

○ 산출내역 1. 고문변호사 고문료

- 기존 : 200,000원× 8명×12개월 =19,200,000원
- 변경 : 500,000원×10명×12개월 =60,000,000원(40,800,000원 증가)

▶ 연간 40,800,000원 증가

○ 산출내역 2. 중요법률자문

- 1(년간 중요자문 의뢰 건수)×3,000,000원=3,000,000원

▶ 연간 3,000,000원 증가

※ 현재 하남시의 1건당 자문료는 6~9만원 수준이고, 조례 개정시 1건당 자문료는 12.5만원~16만원 수준임(추후 규칙 개정 가능)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월중의 자문실적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월 5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3.19., 2019.4.5, 2020.5.8.>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1건당 100,000원 <개정 2019.4.5.>

	조례 개정 전	조례 개정 후
월 지급 고문료	월 20만원	월 50만원
실제 지급 자문료	3건 자문시 건당 6.6만원 ¹⁾	3건 자문시 건당 16만원 ³⁾
	4건 자문시 건당 7.5만원 ²⁾	4건 자문시 건당 15만원 ⁴⁾
	5건 자문시 건당 8만원	5건 자문시 건당 14만원
	6건 자문시 건당 8.3만원	6건 자문시 건당 13.3만원
	7건 자문시 건당 8.5만원	7건 자문시 건당 12.8만원
	8건 자문시 건당 8.75만원	8건 자문시 건당 12.5만원

다.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등

- 고문변호사 착수금 지급 일람표(조례 별표2.)에 소송물가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착수금 지급 한도를 상향

1) 20만원/3건=6.6만원

2) 30만원/4건=7.5만원

3) 50만원/3건=16만원

4) 60만원/4건=15만원

□ 조례 개정안

기 존		변 경	
소송물가액	지급액	소송물가액	지급액
...
5억원 이상	4,550,000원	5억원 이상	4,550,000원
		6억원 이상	5,050,000원
		7억원이상	5,550,000원

□ 5년간 소송물가액 6억원 이상 사건의 착수금 지급 건수

평 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6건	5건	1건	7건	4건	2건

○ 산출내역

- 3.6(소송물가액 6억 이상 사건 평균 건수)×1,000,000(추가 지급 상한액)=3,600,000

▶ 연간 3,600,000원 증가

라. 직원등의 변호비용 등의 지원

□ 기존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변호비용 등을 직원등(공무직, 단기근로자 등 포함) 피소 뿐만 아니라 제소 단계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기존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변호비용 지원 사례는 2건이 있었으며 금액은 2020년 6,000천원과 2022년 5,005천원이었음

□ 현재 구체적인 추정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연간 5,000천원으로 산정함

▶ 연간 5,000,000원 증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세 출		77,520	129,920	129,920	129,920	129,920	597,200
법무행정/소송수행 201 일반운영비		77,520	129,920	129,920	129,920	129,920	597,200
재원 조달		77,520	129,920	129,920	129,920	129,920	597,2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77,520	129,920	129,920	129,920	129,920	597,200
	지방세	77,520	129,920	129,920	129,920	129,920	597,2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